

**연구논문**

**외환위기 이후 계층의 양극화: 변화된 일상과 소비생활\***

The Gap between Social Stratific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Change of Living Conditions and Daily Life as a Consumer.

남은영\*\*

Nam, Eun - Young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득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난관과 동시에 발생한 개인해체 및 사회해체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개인 및 집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중산층 귀속감을 통하여 중산층 잔류 및 이탈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약 60%가 중산층에 잔류하였고 나머지 40%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3명 중 1명 이상이 소득과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산 및 소득의 감소는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리고,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층이동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생활비규모의 축소 및 건전소비가 확산되었으나, 소비행위는 양극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 선호 경향과 지위소비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층별 소비생활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은 교육비 부담을, 하층은 생계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한 집단과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일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며 강한 교육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굴절양상이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증가 및 감소여부와 계층이동의 양상이 일상의 변화 및 소비생활의 양극화를 조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주제어:** 외환위기, 중산층, 계층이동, 양극화, 일상 및 소비생활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인 “사회의 질 연구: 사회문화적 측면” (과제번호 J01602)의 연구성과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동국대학교 강사 남은영.

E - mail : neylee@hanmail.ne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of income, everyday life and living condition of consumer in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is. In this period financial crisis was the crucial factor behind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dissolution of families and individuals. This research explores the range and degree of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 explore the social mobility in terms of maintaining middle class and falling into the lower class measured by middle class identification. The 60% of the middle clas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maintained the middle class position and the rest of people left out middle class and fell into lower class. The 60% of those who has been maintained and has just became the members of middle class were college - educated people. The great part of people whose income and assets has increased after financial crisis belongs to college - educated group. Many of those whose income have decreased belong to the high school educated group and below, the older than 50 years old, self - employed without employee and unpaid family employee. Those whose income and assets decreased and those who experienced downward mobility have undergone changes in everyday life and living conditions as a consumer. Many of them experienced the unemployment, nonpayment or credit - delinquency, dissolution of family, worsening health condition, depression, feeling the impulse to commit suicide simultaneously. The poor consumer disposition, reduction of living expenses, sound consumer culture have expanded to people since economic crisis. The middle class reported that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often goes beyond the family ability to pay. The lower class has suffered from the cost of living. In a meanwhile luxury goods preference, consumer consciousness for status symbol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mong all the classes since 1997. Thus fluctuations of one's income and social mobility during past 10 years were some of the major determinants which brought about the various damaging life events, changes of living conditions and everyday lives as a consumer.

**Key words** : financial crisis, middle class, polarization, daily life as a consumer

## I . 문제제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첨예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1997년까지 대체로 평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기존연구(이정우·이성립 2001; 최희갑 2002; 조성원 2005; 민승규 2006; 홍중학 2006)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계층이동 및

소비생활의 양극화 현상이 외환위기의 사회적 결과로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양상을 밝혀 보려는 연구들은 크게 두 갈래로 대별되고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외환위기가 왜 발생하였는가'하는 원인을 밝히려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후 기업들의 부도 및 도산, 대규모의 실업발생,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대 및 외환위기 후유증을 분석하려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 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밝혀 보려는 연구들도 있었다(김인준 1998; 홍원탁 1998; 박원암·최공필 1999; 오정훈 1999; 송정기·박계규 2001, 강두용 2005; 김학주 2004, 2005).

외환위기 직후의 관심이 외환위기의 원인론에 관한 것이라면 외환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관심은 주로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사회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이호성 2004).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적 결과를 정리해 보면, 계급과 계층의 양극화, 신빈곤계층의 등장, 노동시장의 왜곡,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실업의 대중화, 가족의 해체, 생계형범죄의 증가, 한탕주의 사회 가치관 확산, 조직구조의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다(박길성 2003).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위기에 대한 연구들은 소득 분배의 변화 및 양극화에 관한 연구(이정우·이성림 2001; 최희갑 2002; 조성원 2005; 홍종학 2006)와 노동시장의 변화 및 근로 노동계층에 관한 연구(송호근 2002; 금재호·조준모 2001; 김영란 2004; 금재호 2006; 김교성 2007; 전병유 2007) 등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동요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성민 외 1999; 이정우·이성림 2001; 남준우 2007; 삼성경제연구소 2006; 홍두승·김병조 2008).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중산층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다.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전체인구의 약 40%가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60% 정도가 중산층 귀속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1990년대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에 걸맞는 소비양태나 생활양식이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중산층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및 이들의 생활양식이 사회질서와 발전을 가름하는 잣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소멸” 또는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최희갑 2002). 실제로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7).

이와 같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한국의 소비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한국정부가 외환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났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도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 따라서 소득감소율 이상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실직가능성의 증가 그리고,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대적인 소비여력 감소로 실속형 제품의 소비와 함께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형할인점 판매가 소비시장의 한 축으로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명품소비가 확산되고 고가품시장도 성장하여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지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강태욱·윤종일 1999).

그러나 기존연구는 대체로 전반적인 중산층 규모의 감소나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적 변화 등을 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외환위기의 충격이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경험되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드물다. 또한 계층이동의 측면을 고려하여 동태적인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적인 결과들을 분석한 연구도 매우 미흡하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계층구조는 중산층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하층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하향이동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 몰락현상은 하층에서 다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진입장벽이 존재함으로써 상향이동이 어려워진 변화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신광영 2008). 그러나 이들 중 소수의 사람들은 과거에 비중산층이었다가 중산층으로 진입하여 상향이동을 함으로써 비중산층에 잔류하거나 혹은 하향이동을 한 다수의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이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된 사회이동의 원인과 실태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의 원자료에 대한 분석과 기타 통계자료(소비자보호원 1999)들을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소득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난관과 동시에 경험했던 개인해체 및 사회해체를 포함한 제반 사회문제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개인 및 집단에 미친 영향을 계층별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계층이동의 동태적인 관점에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외환위기 이후의 계층이동과 소득 및 자산변화를 통해서 본 양극화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계층이동 및 소득과 자산의 변화가 초래한 일상과 소비생활의 격차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의 계층이동의 양상과

특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중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과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 과거에 중산층이었다가 현재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리고, 계속 비중산층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와 특징에 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경향이 계층이동, 자산 및 소득변화 그리고, 계층범주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각 집단별로 소비의식과 실제 소비생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소비의식과 소비생활의 여러 측면 중 집단 간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의 굴절양상이 계층별로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계층이동의 동태적인 관점에서도 집단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소득 및 소비격차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기존연구의 검토

### 1. 소득분포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감소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고도성장과 더불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대체로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는 지니계수가 완만하게 하락함으로써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소득분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의 실종’ 혹은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서 중산층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이와 함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지만, 소득분배에 있어서 어떠한 계층을 중산층이라 지칭하는지 중산층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비중에 대한 연구 또한 이 정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남준우 2007).

외환위기 이후의 중산층규모의 축소 및 양극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소득을 통해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으며 양극화지수<sup>1)</sup>의 추정을 통해 중산층 감소를 실증하고 있다. 류상영

1)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는 Wolfson 지수와 ER 지수 등이 있으며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는 지니계수와 5분위, 10분위 분배율 등이 대표적인 측정지표이다.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란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Wolfson 지수는 중위소득과 타계층 소득 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해 산출하는 수치로서 중산층의 소멸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ER 지수는 경제주체들의 선호체계에 의거해 산출되는 것으로 특정 소득 계층으로의 소득집중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다극화지수들은 소득불균등 여부보다 소득집중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중요시한다. 지니계수는 실제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 곡선

(1999)의 연구에 의하면, 계층을 구성하는 중요한 객관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평균가계소득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계층<sup>2)</sup>은 1990년대 전반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류상영 1999).

중산층을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유경준(2008)에 의하면, 전국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1996, 2000)와 가계조사(통계청 2006)를 이용한 분석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소득기준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의 크기를 각각 계산하였는데<sup>3)</sup>, 이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비중은 1997년 58.7%에서 1999년 58.1%로 그리고, 2001년 56.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김성환 외 2004). 신동균·전병유(2006)는 1997년도 이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최근 양극화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해 왔기 때문이지만 집단 내(특히 저소득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총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보다는 주로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신관호·신동균(2007)은 한국경제의 소득분포의 변화양상을 외국과 비교하여,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지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극화의 진전은 저학력자 및 고연령층들에게 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득양극화 외에도 노동시장 이원화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등의 차이가 소득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윤진호 2005). 양극화의 일차적인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저학력자, 여성

---

과 가상 소득분배균등선 간의 면적비율에 의거한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로 0.4 이상이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하다고 알려져 왔다.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반면 5분위 배율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소득불균등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소득불균등 수준은 양호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심각할 수 있으며, 역으로 소득불균등이 심각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양호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2) 중간소득계층은 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류상영 1999)

3) OECD 기준에 따라 중간값의 150% 이상 소득층을 상류층, 50~150% 계층을 중간층, 그리고 50% 이하를 빈곤층(하류층)으로 분류한다.

가구주, 자가고용, 무급이나 친척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하위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고학력자가 상위층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나(남준우 2007), 제조업의 비중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가구주들이 소득편차가 큰 비제조업으로 유입된 것(신관호·신동균 2007)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소득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반면, 계급론적인 관점에서 신광영(2008)의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불평등 심화와 빈곤층 확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신광영 2008).

한편 중산층의 몰락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도 다수 있는데, 이 연구들은 크게 중산층 규모의 감소 양상에 대한 연구와 중산층 쇠퇴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하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먼저 중산층의 규모 변화에 대한 연구로서 **Horrigan & Haugen(1988)**은 1969년에서 1986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통해 미국의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고 하층계급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하층계급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hakhulina(2001)**는 러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는데, 중간계급의 명목임금이 감소한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이 평가절하되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중산층 역시 빈곤해져서 중산층에서 소비,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생활수준의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경험했거나 실직에 위협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소득과 소비에서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도와 도덕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중산층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중산층의 축소를 후기산업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과 각 국가별 특성을 국제비교를 통해 고찰하는 연구로 나뉜다. 먼저 후기산업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전통적인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것은 숙련직과 중간소득군의 직업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소수의 전문직과 관리직 고용에 의해 더욱 증가되는데,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보다 서비스산업 내에서 고임금직과 저임금직의 상대적인 차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immie & Ray 1989**). 이와 유사하게 **Rosenthal(1985)**은 직업구조의 변화가 개인소득의 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1973년~1982년 미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조업의 감소와 하이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직업구조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수의 저임금 직종의 증가와 상품 생산에서 서비스 생산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국제비교를 시도한 **Pressman(2007)**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경제적인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1) 이혼율의 증가 및 인구구조에서의 연령층 변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 2) 1970년대와 1980년대 많은 중산층 일자리(제조업)의 축소, 3) 경기 순환으로 인한 실업, 4) 다양한 공적 이전과 같은 공공정책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sup>4)</sup>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중산층의 감소는 한국뿐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났으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은 다른 국가에서도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cMahon & Tschetter 1986; Banerjee 2008; Weller 2006; 김홍중 외 2005). 그러나 서구에서는 중산층 규모의 축소가 주로 197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었음에 비해,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내에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충격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중산층의 축소로 나타나는 경제적 양극화는 가장 원초적인 차원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뿐 아니라 소비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양극화 또한 계층간 생활양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적 차등화효과로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된다(김문조 2008). 외환위기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의 위축 및 소비생활에서의 합리화경향이 나타남과 동시에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고소득층의 주도로 고급소비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서범석 1998; 최순화 2001; 이상민 2007). 또 소비의 양극화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고가 해외유명브랜드를 비롯한 명품 선호 경향이 강한데, 이는 중산층이 '명품'구매라는 소비행위를 통해 중하층과 구별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김난도 2007)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문화고유의 논리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제우위적 상황에서 상류계급의 소비행태에 대한 모방심리가 이례적으로 증폭되어 있다고 설명한다(김문조 2008). 주관적 계층소속감과 생활양식의 특성 및 소비양식의 측면에서 중산층의 양극화에 대하여 고찰하며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웰빙지향성을 갖는다는 점을 밝힌 연구도 있다(장미혜 2008).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기존연구는 중산층규모의 축소나 소득분포의 양극화추세를 밝히거나 혹은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나타난 사회현상들을 분석하는 것들이며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결과가 구체적으로 각 계층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층이동으로 인한 일상 및 소비생활에서의 변화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양극화현상에 대한 고찰을 함에 있어서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4) 그는 1980년~2000년의 소득변화를 고찰하여 중간소득의 125%이상의 소득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영국, 대만, 스웨덴이 중산층 비중의 하락이 큰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Pressman 2007).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양극화가 가져온 사회적 충격과 파장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상 및 소비생활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중산층 귀속의식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sup>5)</sup>(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에서 나타난 한국 외환위기 전후의 계층별, 계층이동의 변화양상을 중산층 귀속의식을 기준으로 고찰하고 자산 및 소득의 증가/감소여부를 중심으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0년 전과 현재의 중산층 귀속감을 중심으로 중산층 잔류집단 및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험한 일상의 충격들과 소비생활의 변화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동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소득 및 계층의 양극화가 초래한 사회적 결과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Ⅲ. 계층의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계층이동

#### 1. 중산층 잔류집단과 이탈집단: 중산층 귀속감을 중심으로

지난 20여년 간 언론사나 사회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70~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홍두승 2005),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현재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28%이며 나머지 72%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외환위기 전후의 계층이동의 변화양상을 중산층 귀속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자료를 통하여 현재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중산층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외환위기 직전인 10년 전에도 중산층에 속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교차분석하여, 1) 중산층에 계속 잔류하고 있는 사람과 2)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 3) 비중산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 4) 비중산층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의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5)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12일 동안 외환위기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조사되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인구수비례 무작위추출이고,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며 1:1 개별면접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 1〉 중산층 잔류 및 이탈집단(중산층 귀속의식)

계층이동	빈도	빈도	비율(%)
중산층 잔류		225	22.4
중산층 이탈		157	15.6
중산층 진입		56	5.6
비중산층 잔류		567	56.4
전체		1005	100.0

〈표 2〉 중산층 잔류 및 이탈집단의 교육수준

(단위: %)

교육수준	계층이동	중산층 잔류	중산층 이탈	중산층 진입	비중산층 잔류	$\chi^2$
중졸 이하		12.4	10.2	7.1	26.3	68.799 (p<.001)
고졸		29.3	45.9	33.9	41.1	
대재 이상		58.2	43.9	58.9	3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중산층 귀속의식을 통해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5.6%이나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15.6%로 나타나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산층 귀속의식의 측면에서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 중의 약 59%가 중산층에 잔류하였고 나머지 41%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지위의 하락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교육수준별로는 중산층에 잔류한 사람들 중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많아서 58.2%를 차지하였으며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도 대학재학 이상이 5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에 비해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고졸 이하가 56.1%, 비중산층에 계속 잔류하는 사람들도 고졸 이하가 67.4%로 가장 많았다. 즉 중산층 지위의 유지나 비중산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승은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 즉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가구소득을 통해서 볼 때에도 중산층에 잔류한 사람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402.6만원,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은 304만원,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은 444.6만원, 비중산층에 잔류하고 있는 집단은 258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

〈표 3〉 중산층 이동집단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계층이동	가구소득	평균	표준편차	$\chi^2$
중산층 잔류		402.6	247.2	40.226 (p<.001)
중산층 이탈		304.0	171.2	
중산층 진입		444.6	300.4	
비중산층 잔류		258.0	155.0	
전체		307.6	202.6	

〈표 4〉 중산층 이동집단별 연령

(단위: %)

연령	계층이동	중산층 잔류	중산층 이탈	중산층 진입	비중산층 잔류	$\chi^2$
20대		31.1	21.7	25.0	18.9	46.661 (p<.001)
30대		20.0	16.6	35.7	26.8	
40대		17.8	35.7	26.8	20.1	
50대 이상		31.1	26.1	12.5	34.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있고 다음으로 중산층에 잔류한 집단의 소득이 높았음에 비해,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은 앞의 두 집단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100만원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이나 현재 모두 비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가장 낮은 가구소득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보다는 약 140만원,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보다는 약 180만원 정도 낮은 가구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이동집단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Sheffe), 비중산층 잔류집단에 비하여 중산층 잔류집단과 중산층 진입집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은 40대 이상이 전체의 61.8%로서 20~30대에 비해 더 많았으나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30대 이하가 전체의 60.7%로, 40대 이상에 비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산층으로부터의 이탈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지만, 중산층으로의 진입은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30대 이하가 높게 나타나서 외환위기 이후 계층의 양극화는 고령자에게 더 불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 2.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을 통해서 본 계층의 양극화

위에서는 외환위기 전후의 중산층 귀속의식의 변화를 교차분석하여 중산층에 잔류하는 집단과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의 특징을 교육 및 가구소득 그리고, 연령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불평등이 심화된 현상에 대해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분배의 변동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불경기 때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주로 노동소득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불경기 때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Budd & Whiteman 1978). 첫째, 실업자들은 소득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다른 집단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업할 확률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주로 비숙련공, 저임금노동자일수록 높다는 사실이다. 숙련공, 감독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고정자산의 성격이 강하고, 기업은 이미 이들에게 상당한 인적자본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불경기가 닥치더라도 좀처럼 해고하지 않는다. 셋째, 실업으로 인해 저숙련공의 초과공급이 나타나므로 저숙련공과 숙련공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쉽다. 즉 이들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황기에는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쉽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은 모두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2002~2003년 사이 약간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지만 2004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지수를 표준화하여 비교해 보면, 1999년~2002년까지는 불균등지수(지니계수)가 소득양극화지수를 상회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양극화지수가 소득불균등지수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2003년 이후에는 한국사회에서 소득불균등 현상보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고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산업구조의 변화, 연봉제 확산, 경력직 선호, 노동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경기침체 등이 소득양극화의 요인들이 된 것으로 보인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노동유연성 확보와 임금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체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활용이 확산되었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19.7%에 불과하지만, 1~4인 사업체는 50.4%

〈표 5〉 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소득변화집단과 자산변화집단의 분포

변화양상	소득변화집단		자산변화집단	
	빈도	%	빈도	%
증가	229	22.8	153	15.2
감소	358	35.6	364	35.2
변화없음	415	41.3	488	48.6
전체	1002	99.7	1005	100.0

나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소매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24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9%에 달하고 있다(노동부 2005).

이와 함께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자영업에 과다 진입하여 자영업자 간에 과당경쟁이 유발되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자영업 창업이 증가되었는데, 농업을 제외한 자영업자 수는 1998년 약 420만 명에서 2004년 약 6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sup>6)</sup> 2009년 현재 약간 감소하여 597만 명에 이른다(통계청 2009). 경기침체로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실질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이 1998년 33.8%에서 2003년 41.2%로 급증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되었다(최효미 2005).

앞에서는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외환위기 전후의 계층별, 계층이동의 변화양상을 중산층 귀속의식을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자산 및 소득의 증가/감소 여부를 중심으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 볼 때 현재 가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질문하여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소득과 자산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자산이나 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한 사람(각각 22.8%, 15.2%)보다는 감소한 사람(각각 35.6%, 36.2%)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산의 경우에 증가한 사람보다 감소한 사람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는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각각 50.3%, 55%)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고학력층에 의해 주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소득의 감소를

6)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33.6%(2006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인 미국 7.3%, 일본 10.8%, 독일 10.1%, 대만 16%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아 고령자에게 소득의 감소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도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한 사람들은 서울과 경기지역(각각 50.7%, 55.6%)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이나 자산의 증감이 수도권 거주자들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46.1%)와 무급가족종사자(48.1%) 중에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 다음은 피용자를 둔 사업주(32.7%), 임금근로자(28.1%) 순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 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용자를 둔 사업주의 경우 소득이 증가한 집단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영업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취업형태나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도 정규직(33.5%)보다는 비정규직(44%)에서 소득감소를 많이 경험했고, 상용직(33.9%)보다는 일용직(63.2%)과 임시직(46.3%)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실직경험이 있는 사람(57%)은 실직경험이 없는 사람(30.7%)에 비해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비중이 높았고, 자산 역시 실업을 경험했던 사람(67.4%)이 실업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28.9%)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실업을 당했을 경우 생활비 충당이나 자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자산의 처분이 함께 이루어져 자산의 감소 또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소득의 변화와 자산의 증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현재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집단의 평균소득은 406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59만원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았다. 자산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월평균 가구소득도 386만원으로 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인 287만원에 비해 약 100만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직후의 자산이나 소득의 측면에서의 변화는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서 현재 가구소득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실질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는 많은 경우 각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어서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가구소득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외환위기 이후 소득변화/자산변화집단별 현재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변화양상	소득변화 자산변화	소득변화집단			자산증감집단		
		평균	표준편차	$\chi^2$	평균	표준편차	$\chi^2$
증가		406.0	242.2	40.995***	385.9	232.5	14.145 (p<.001)
감소		259.0	179.8		287.2	186.1	
변화없음		294.6	177.8		298.1	198.9	
전체		307.0	202.8		307.6	202.6	

이와 같이 자산과 소득의 변화를 통해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경제적인 격차가 집단 간에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고학력자와 수도권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소득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고령층에서 소득감소의 비중이 높았다. 이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사태,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 및 자산의 감소를 경험했으나 일부의 사람들은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직후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하락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헐값에 자산을 처분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풍부한 현금동원력으로 부동산을 평가절하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이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액을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 자산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직후의 금융권의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의 상승도 금융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감소는 저학력층과 자영업자, 일용직 및 임시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 실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력 및 직업, 고용 및 취업형태가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계층별<sup>7)</sup>로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를 질문하여 소득변화와 자산변화 상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7) 계층을 판별하기 위하여 홍두승(2005)의 중산층 판별기준을 따랐다. 홍두승은 소득, 교육, 직업, 주택의 네 가지 요인을 채택하고 있으나, 본 조사(『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항목(소유여부 및 규모)이 조사되지 않은 관계로 소득, 교육, 직업의 세 가지 요인만을 사용했다. 먼저, 소득은 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교육은 초대졸 이상, 직업은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해서 2점 이상이면 핵심적 중산층, 1점이면 주변적 중산층, 0점일 경우 하층으로 분류하였다.

다. 핵심적 중산층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25%)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32.2%)이 더욱 많았으며 주변적 중산층과 하층은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각각 35.6%, 44.8%)이 증가한 사람들(각각 21%, 10.4%) 보다 훨씬 더 많았다. 즉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주변적 중산층과 하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에도 4명 중 1명 정도는 소득이 감소했고 3명 중 1명만이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핵심적 중산층도 더 이상 위기에 안전한 계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층의 경우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자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자산이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산이 감소한 비율도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 소득의 감소에 비해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주변적 중산층은 소득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비중이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일수록 소득보다 자산에서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층은 자산의 감소(35.6%)보다 소득의 감소(44.8%)가 더 많이 나타나서 소득의 보전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의 변화를 계층별로 비교하면, 주변적 중산층(38.1%) 다음으로 하층의 자산감소(35.6%)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산이 증가된 사람들은 핵심적 중산층(21.5%)일수록 많고 하층(8%)의 경우가 가장 적는데, 핵심적 중산층은 자산증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주변적 중산층보다 약 2배, 하층에 비해서는 약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하층과 주변적 중산층일수록 소득과 자산의 감소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한 사람들이 타 계층에 비해 더욱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증감과 자산의 증감도 계층별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계층별 소득변화 및 자산변화 집단

(단위: %)

소득 자산변화		계층			X <sup>2</sup>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	
소득변화	증가	32.2	21.0	10.4	34.420 (p<.001)
	변화없음	41.9	43.4	44.8	
	감소	25.9	35.6	44.8	
자산변화	증가	21.5	11.6	8.0	19.592 (p<.01)
	변화없음	46.2	56.4	56.4	
	감소	32.3	38.1	35.6	



그러나 자산의 경우는 핵심적 중산층도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아서 중산층의 경우 외환위기의 여파가 주로 자산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하층의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더욱 심각한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 IV. 외환위기 전후의 일상 및 소비생활의 변화

### 1. 일상생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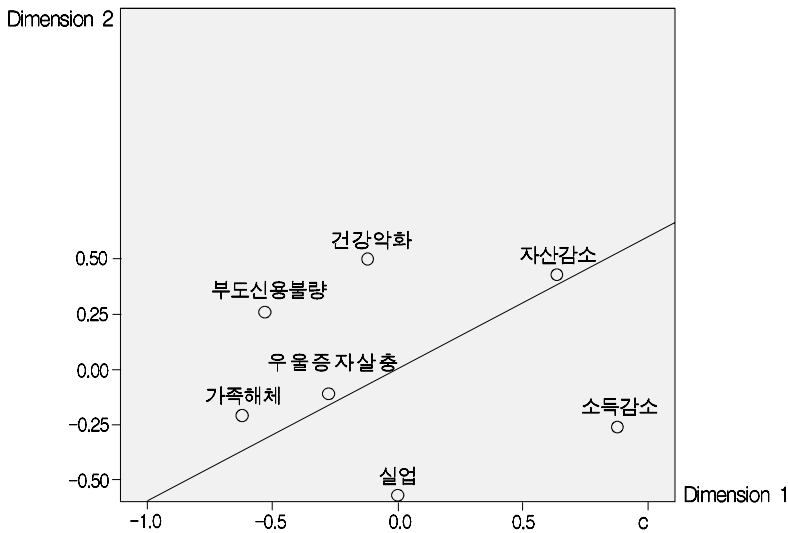
경제위기와 불황은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소득이나 자산의 감소, 실업이나 경제활동의 위축과 같은 경제부문에서의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개인들의 소비생활과 일상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개인의 심리상태 및 행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의 불안요인에 관한 소비자보호원(1999)의 조사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의식(77.6%)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소득감소(41.7%)와 실직에 대한 불안감(37.5%)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높은 세금부담(17.2%)과 금리부담(16.1%)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비례하여 각종 사회해체 현상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좌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알콜중독과 마약중독에 빠지는가 하면 가출을 하거나 심지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도 더욱 빈번히 발생하였다(중앙일보 1998. 11. 10). 즉 실직과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개인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생명을 손상시키는 개인의 해체로 귀결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해체도 초래한다. 우선 가족해체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는 이혼인데, 1998년 1월~9월 동안 모두 94,898건의 협의이혼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4%가 증가했다고 한다(중앙일보 1998. 11. 10). 한편 부모의 의도적 유기나 실수로 발생한 기아와 미아의 숫자는 1998년 전반기에만 4,876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성경룡 1998).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본 조사에서도 실제로 자산이나 소득의 감소 등 경제적 상황의 악화를 경험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개인과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8%가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36%는 자산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9.2%는 실업, 11.6%는 부도 및 신용불량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전체의 30% 이상의 사람들이 단지 소득이나 자산의 감소뿐 아니라 실업과 부도 및 신용불량 등의 극단적인 경제적인 위기까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나 변화뿐 아니라 건강악화(16.4%)나, 우울증 및 자살충동(9.1%)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자산감소, 소득감소, 실업, 가족해체, 부도 및 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은 자산이 감소한 집단과 소득이 감소한 집단에서 세 가지 이상의 중복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산이 감소한 사람 중에 90.7%가 두 가지 이상의, 53.3%가 세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 역시 66%가 두 가지 이상, 40%가 세 가지 이상의 중복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산이 감소한 사람들의 57%가 소득도 감소하였으며 37%는 직업의



〈그림 1〉 외환위기 전후 경험한 사회문제 다차원척도 분석

\* 자료: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07)

8) 실직과 감봉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몰린 개인은 1998년 9월말까지 230만 명에 이르러 외환위기 이후 95만명(70.9%)이 증가하였고, 1997년에 4건이던 법원의 소비자과산건도 1998년 10월까지 108건으로 무려 27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사(1998)의 국민여론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빚보증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사람이 39%에 이르며, 결과적으로 친·인척간의 경제거래관계에서도 이 전과는 다른 불신과 보증기피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유홍준 2000).

안정성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다차원적도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도 자산의 감소와 건강악화, 부도 및 신용불량, 우울증 및 자살충동, 가족해체 등의 경험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의 감소는 실업과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산 및 소득의 감소, 개인해체와 가족해체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것들이 서로 중복되어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외환위기 이후의 일상의 변화에 대해 특히 실업, 부도 및 신용불량, 우울증 및 자살충동, 건강악화, 가족해체 등을 경험했는지를 모두 고려하여 이 중 한 가지라도 경험했을 경우와 전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외환위기 이후 부정적인 일상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B	Exp(B)
삼십대	.158	1.171
사십대	.154	1.166
오십대 이상	.133	1.142
대도시	-.151	.860
비정규직	.086	1.090
중졸 이하	.155	1.167
고졸	-.288	.750
가구소득(연속)	-.001	.999*
화이트칼라	.123	1.131
자영업자	-.058	.944
노동자	.356	1.428
자산감소집단	1.391	4.020***
소득감소집단	.611	1.842***
상수	-1.359	.257***
-2LL	1097.577	

\*\*\* p<.001 \*\* p<.01 \* p<.05

\* 기준: 이십대(연령), 중소도시·읍면(지역규모), 정규직(고용형태), 대졸(학력), 전문·관리직(직업), 자산증가/변화없음(자산 변화), 소득감소/변화없음(소득변화)

\* 종속변수: 부정적인 일상의 경험=실업+부도/신용불량+우울증/자살충동+건강악화+가족해체

개인해체와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의 여부는 연령, 지역규모, 고용 형태, 학력,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현재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할 확률이 낮았다. 자산이 감소한 집단은 자산이 증가했거나 변화 없는 집단에 비해 실업, 부도 및 신용불량, 우울증 및 자살충동, 건강악화, 가족해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했을 확률이 4배 정도 더 높았으며,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에 비해 이러한 확률이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의 감소와 소득의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의 일상의 개인적 해체나 가족해체 및 사회문제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및 소득변화뿐 아니라 계층이동 유형에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의 부정적인 경험이 집단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자산감소, 소득감소, 실업(명예퇴직), 가족해체, 부도 및 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 및 자살충동과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경험은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하향이동을 한 집단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산의 증가는 중산층에 진입한 상층이동집단과 중산층에 계속 잔류하고 있는 집단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개인적 해체 및 가족해체를 가장 심각하게 겪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하향이동집단에 중첩되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은 중산층 귀속감을 상실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표 10〉 참조).

〈표 10〉 계층이동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일상의 변화

(단위 %)

일상의 변화 \ 계층이동	계층이동				χ <sup>2</sup>
	중산층 잔류	중산층 이탈	중산층 진입	비중산층 잔류	
자산증가	21.0	7.0	39.3	12.9	41.226***
자산감소	28.1	70.1	23.2	31.6	93.431***
소득감소	35.3	77.7	37.5	46.3	73.150***
실업(명예퇴직)	9.8	38.9	12.5	18.2	53.686***
가족해체	3.1	10.8	1.8	4.2	93.431***
부도/신용불량	5.8	23.6	7.1	11.1	30.320***
건강악화	11.6	28.7	3.6	16.3	27.632***
우울증/자살충동	3.1	21.0	8.9	8.5	36.244***

\*\*\* p<.001 \*\* p<.01 \* p<.05

외환위기 이후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자산이 증가한 집단에서는 소득의 증가(52.9%) 비중이 높았고, 가족유대의 증가(29.4%), 직업안정성(19.6)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는 주로 소득과 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로 나타난다. 특히 자산의 증감은 일상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산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득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이로 인해 가족의 유대가 증가하며 직업의 안정성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 및 부채의 증가, 직업안정성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자산-소득-부채-직업안정성’이 일상생활에서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계층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산층 이탈집단의 경우 가족유대의 감소, 직업안정성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1〉 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은 소득증가, 가족유대의 증가, 직업안정성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경험한 비중이 타 집단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 및 소득이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 그리고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과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 간에는 경제적인 상황과 계층적 위치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자산변화 및 계층이동집단의 현재의 일상의 변화

(단위: %)

자산변화/계층이동 일상의 변화	자산 증가	자산 변화 없음	자산 감소	$\chi^2$	중산층 잔류	중산층 이탈	중산층 진입	비 중산층 잔류	$\chi^2$
가족유대 감소	5.9	8.2	13.7	30.766***	4.9	17.2	3.6	9.9	27.623**
직업안정성 감소	19.6	15.0	37.1	88.191***	15.6	40.1	17.9	22.9	48.375***
부채증가	17.0	18.9	33.2	69.423***	15.6	43.9	17.9	23.8	58.470***
소득증가	52.9	17.6	17.0	193.468***	32.9	8.9	58.9	19.0	128.758***
가족유대 증가	29.4	14.1	14.8	30.766***	19.6	11.5	26.8	16.7	27.623**
직업안정성 증가	19.6	7.0	12.4	88.191***	10.7	12.1	23.2	10.8	48.375***
부채감소	24.2	8.2	17.6	69.423***	14.7	14.0	23.2	14.0	58.47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p<.001 \*\* p<.01 \* p<.05

## 2. 외환위기 이후 계층별 소비생활의 변화

198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생리적 욕구충족의 단계에서 사회문화적 욕구충족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강명구 2006). 이에 따라 한국의 소비문화는 과잉소비, 과시적 소비, 현재중시소비, 경쟁적 모방소비, 충동소비 등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소비행태가 복합된 과소비문화였다고 지적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민간소비는 경제침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자산가치의 하락 및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과 행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민간소비는 급락세를 나타내었다가 약 1년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후 다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2000년 11월에는 1998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sup>9)</sup> 그러나 이와 함께 고가품, 사치품, 수입품의 소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소비자보호원에서 1998년 2월 전국 5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IMF체제 전후의 소비의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소비생활과 여러 경제변화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 물가상승(77.6%), 소득감소(41.7%), 실직(37.5%) 등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적했고 물가상승 불안은 여성, 20대 또는 50대 이상, 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어 경제적인 취약계층에서 물가불안심리가 심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소비자보호원 1999).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의 생활비 규모의 축소 및 건전소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의 소비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명품은 비싼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명품 선호 경향은 1996년 20.5%에서 2007년 약 39%로 크게 증가했고, ‘소비는 곧 지위나 품위를 나타낸다’는 소비와 지위를 동일시하는 의식은 1996년 약 19%에서 2007년 35.5%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기 좋은 곳을 선호하거나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경향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직후 물가

9)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68.8로 이 조사가 시작된 1998년 11월 65.5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인 가구와 늘린 가구가 같은 수준이고 100미만이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뜻이다.

10) 한국은행이 2000년 11월 28일 발표한 10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2000년 10월까지 TV, VTR, 음향기기, 승용차, 2륜차, 모피의류 등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동아일보 2000. 11. 12).

상승 및 실질소득의 감소, 실직의 불안 등으로 가계 소비지출과 개인소비가 감소되며 건전 소비 경향이 증가하지만, 소비의식에 있어서는 명품 및 여가선호 등의 지위소비 및 질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감소하지 않고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에 고가품 소비를 선호하는 고소득층이 주도하는 고급소비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중산층에게도 모방소비가 확산되는 현상의 배경을 소비의식의 측면에서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소비생활에서의 변화 속에서 계층별, 계층이동 유형에 따른 소비생활의 양상은 어떠한가? 전체적으로 가계지출의 경제적 부담의 순위는 외환위기 이후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식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계 부담순위는 교육비(35.8%), 식생활비(22.4%), 주거비(1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명품선호 성향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가 곧 지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소비와 지위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명품이라 불리는 제품은 비싼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명품선호의식은 계층이나 소득변화 여부나 계층이동 여부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약 40~45%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생활수준은 곧 그 사람의 지위나 품위이다'라는 지위-소비 동일시의식 역시 계층, 소득변화, 계층이동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중산층 잔류집단을 제외하면 전 집단이 거의 35~40% 사이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소비의식은 여가활동에 관한 것으로 '돈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계층이동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계층이동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55.4%)과 중산층에 잔류하는 집단(53.8%)의 여가활동에 대한 찬성비중이 높아서 중산층 귀속감을 가진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여가활동을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49.7%)이고, 비중산층 잔류 집단(36.9%)은 상대적으로 이들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여가활동이 중산층 귀속감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도 거의 과반수가 '돈이 들더라도 여가활동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한번 중산층의식을 가졌던 경우에는 계층의식의 저하와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명품선호, 소비와 지위 동일시, 여가활동 선호와 같은 소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려고 OLS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소비의식은 각각 5점 척도로 측

정되었는데, 명품선호의식은 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과 이십대에서 사십대까지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에게서 높았다. 그 중 이십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명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여성)도 연령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명품소비의식은 소득과 무관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와 지위 및 품위를 동일시하는 의식 역시 여성과 이십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력, 거주지, 가구소득과는 무관하여 성별과 연령의 효과를 제외한다면, 전 계층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표 13〉 참조).

〈표 12〉 소비의식의 변화(1996~2007)

(단위: %)

연도	소비의식	명품선호	지위소비의식	공기좋은 곳 선호	여가활동선호
1996년		20.5	18.9	-	-
2002년		33.9	23.4	55.0	38.8
2007년		38.9	36.5	56.9	43.7

자료: 한국 소비자보호원 1996, 2002;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

〈표 13〉 명품선호, 지위소비, 여가활동에 관한 소비의식 OLS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명품선호	소비와 지위동일시	여가활동 선호
		B(Beta)	B(Beta)	B(Beta)
여성		.301(.147)***	.198(.105)**	-.011(-.006)
이십대		.390(.158)***	.190(.084)*	.419(.194)***
삼십대		.217(.091)*	.085(.039)	.246(.118)**
사십대		.192(.078)*	-.028(-.012)	.119(.055)
가구소득		.000(.000)	.000(.022)	.000(.084)*
대도시		-.007(-.004)	.027(.046)	-.171(-.095)**
대재 이상		.168(.080)*	.087(.070)	.134(.074)*
정규직		.043(.021)	.006(.003)	.027(.015)
중산층 잔류		.037(.015)	-.069(-.030)	.226(.105)**
중산층 이탈		.007(.003)	.090(.035)	.216(.088)**
중산층 진입		-.010(-.002)	.127(.031)	.260(.067)*
상수		2.595***	2.792***	37.408***
R <sup>2</sup>		.051	.026	.103

\*\*\* p < .001 \*\* p < .01 \* p < .05

\* 기준: 남성(성별), 50대 이상(연령), 중소도시·읍면(지역), 비정규직(고용형태), 고졸 이하(교육), 비중산층 잔류(계층이동)

\* 명품선호(종속변수) = 일반적으로 '명품'이라 불리는 제품은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

\* 소비와 지위동일시(종속변수) = 소비생활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지위나 품위이다.

\* 여가활동 선호 소비의식(종속변수) = '돈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해야 한다.'



여가활동은 다른 소비의식과는 달리 연령의 효과와 계층별 차이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십대와 삼십대일수록, 가구소득이 더 많을수록 중·소도시와 읍·면 거주자일수록,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일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연령과 가구소득으로, 이십대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여가활동 선호도가 현저하게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층일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더불어 계층이동 양상에 따라서 중산층에 잔류하는 집단,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은 비중산층에 잔류하는 집단에 비해 여가관련 소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소비의식과 달리 여가활동 선호는 중산층 귀속 의식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으며,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도 비중산층에 비해 여가활동 선호 등과 관련된 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가활동이 중산층적인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의식뿐 아니라 실제 소비행동에서도 계층 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사교육의 실시는 핵심적 중산층(91.8%), 주변적 중산층(85.9%), 하층(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계층을 불문하고 80% 이상이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의 실시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계층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중산층이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계소비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어 자녀교육비가 중산층의 가계소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하층은 식생활비의 경제적 부담(30.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산층에 비해 주거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공과금 등의 가계소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비 위주의 가계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교육비 부담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층에서도 70% 이상이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사교육은 일부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임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

한편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자녀의 해외유학을 많이 고려하고 있거나 현재 유학중 혹은, 유학경험이 있는 것(45.2%)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에 잔류(44.6%)하거나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49.3%) 역시 해외유학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서, 현재 중산층 귀속감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중산층 귀속감을 가졌던 경우에는 중산층 귀속감을 갖지 않았던 집단이나 비중산층에 잔류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의 해외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소득이 감소한 집단(93.5%)이나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93.2%)일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각각 68.7%, 61.8%)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적 가치는 소득의 감소나 계층의식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표 14〉 계층별/소득변화/계층이동 집단별 가계소비 부담 및 교육소비

(단위: %)

가계소비부담		가계소비 부담						교육소비					
		교육비	식생 활비	주거비 (주택상환비 포함)	보건 의료비	경조 사비	공과금	$\chi^2$	사교육 실시	사교육 비부담	좋은 대학 나와야 출세	해외유학 경험 /고려	$\chi^2$
계층	핵심적중산층	42.6	19.5	11.6	4.0	2.6	1.7	94.473***	91.3	87.4	59.8	45.2	8.207*
	주변적중산층	37.7	23.1	11.9	2.2	4.5	4.9		85.9	92.7	58.2	29.7	
	하층	16.0	30.1	17.1	11.7	8.6	9.2		80.0	70.8	54.6	20.0	
소득 변 화	소득증가	41.0	21.8	11.4	3.1	4.8	1.3	45.415**	84.6	77.3	57.6	38.5	2.520
	소득변화없음	33.5	24.6	13.0	6.7	3.9	5.8		89.0	86.7	50.9	28.8	
	소득감소	35.2	20.4	15.7	10.1	4.7	5.6		82.9	93.5	68.7	36.9	
계 층 이 동	중산층 잔류	39.6	20.0	8.9	5.8	9.3	2.7	63.231**	92.9	88.5	62.2	44.6	17.858***
	중산층 이탈	41.1	16.6	18.5	6.4	0.6	3.2		85.5	93.2	61.8	49.3	
	중산층 진입	41.1	21.4	23.2	1.8	1.8	1.8		76.2	81.3	55.4	38.1	
	비중산층잔류	32.3	25.2	13.0	8.3	3.7	6.2		84.5	83.8	57.1	23.6	

\*\*\* p < .001 \*\* p < .01 \* p < .05

\* 사교육비 부담  $\chi^2$ (계층)=7.045\*  $\chi^2$ (소득변화)=9.748\*  $\chi^2$ (계층이동)=3.701

\* 좋은 대학 나와 출세가능  $\chi^2$ (계층)=7.415  $\chi^2$ (소득변화)=33.024\*\*\*  $\chi^2$ (계층이동)=10.903

\* 해외유학 경험/고려  $\chi^2$ (계층)=8.207\*\*  $\chi^2$ (소득변화)=2.52  $\chi^2$ (계층이동)=17.858\*\*\*

## V. 결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외환 위기의 충격으로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고 하층은 지속적으로 저소득과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소득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난관과 동시에 경험한 개인해체 및 사회해체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제반 사회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개인 및 집단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각 계층별로, 그리고 계층이동의 측면에서 고찰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중산층 귀속감을 통해서 중산층의 잔류 및 이탈을 살펴 볼 때,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 중의 약 60%만이 현재에도 중산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0%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15.6%이며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5.6%로서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비중산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이탈은 고졸 이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산층 진입은 대제 이상의 비중이 높아 양극화는 고학력자에게 유리하게, 저학력자에게는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한 사람보다는 감소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특히, 자산의 경우 증가한 사람보다 감소한 사람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는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고학력층에 의해 주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득의 감소는 저학력층과 50대 이상의 고령층,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가장 많았다. 한편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상용직보다는 일용직과 임시직에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계층별로 살펴볼 때 핵심적 중산층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25%)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32.2%)이 더욱 많았으며, 주변적 중산층과 하층은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각각 35.6%, 44.8%)이 증가한 사람들(각각 21%, 10.4%)보다 훨씬 더 많았다. 즉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주변적 중산층과 하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의 변화 역시 자산이 증가된 사람들은 핵심적 중산층(21.5%)일수록 많고 하층(8%)의 경우가 가장 적는데, 핵심적 중산층은 자산의 증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주변적 중산층보다 약 2배, 하층에 비해서는 약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경우는 핵심적 중산층도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아서 중산층의 경우 외환위기의 여파가 주로 자산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하층의 경우에는 자산의 감소보다 소득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감소가 더욱 심각한 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는 소득이나 자산의 감소, 실업 등의 경제부문에서의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적인 활동, 소비생활,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3명 중 1명 이상이 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실업, 부도·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 및 자살충동, 가족체체 등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이 감소한 사람들의 약 90%가 두 가지 이상,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이상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개인 및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이 증가한 집단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소득도 증가하였으며, 자산이 증가한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가족의 유대와 직장안정성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자산 및 소득의 증감은 일상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로 인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가 일어났는 데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계에서의 유대의 증가 및 직장안정성도 증대되어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한국사회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계층이동에 따라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직장안정성의 감소, 가족유대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으로 진입한 집단은 소득의 증대, 직장안정성의 증가, 가족유대의 증가를 경험한 비중이 높았으며 부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자산가치의 하락 및 고용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생활비규모의 축소 및 건전소비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선호 경향과 지위소비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가품, 사치품, 수입품의 소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고급소비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명품선호 경향이나 소비와 지위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소비의식은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성별(여성)과 연령(이십대)에 따라 더욱 높은 소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여가활동과 관련된 소비의식은 여성과 이십대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일수록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중산층 귀속의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여가활동 선호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층별 소비생활을 통해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패턴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은 교육비와 주거비 위주의 가계소비 지출 구조를 보이는 반면, 하층은 식생활비, 보건의료비, 공과비 등의 생활필수품의 구입 및 생계비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 계층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교육비를 모든 계층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비목으로 꼽고 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집단과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호소하거나 ‘좋은 대

학을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높은 교육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열망은 계층이나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굴절양상이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소득 및 소비격차뿐 아니라 일상과 계층의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고찰하였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증가 및 감소가 일상의 변화와 소비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계층이동의 관점에서 중산층에서의 하향이동 및 중산층으로의 진입 또한 소비생활 및 의식의 격차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의 일상 및 소비생활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들이 계층의 정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이동과 관련된 집단 간의 역동적 변화의 측면에서도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가치와 소비의식은 경제 및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매우 지속성이 강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자료의 제약 상 세대 내 계층이동에 관하여 중산층 귀속의식이라는 주관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계층이동 여부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한 시기에서의 한 개인의 소득 변화와 직업적 이동을 고려한 객관적인 사회계층 변수를 통해 세대 내 이동을 고찰하고 이와 함께 직업 및 소득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에 따른 일상 및 소비생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두용. 2005.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 - 소비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산업연구원.
- 강명구. 2006. 《PX 경제와 도매비시장을 통해 본 한국 소비문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보고서.
- 강태욱·윤종일. 1999. 《소비양극화와 기업의 대응》. LG경제연구원.
- 금재호.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41-73.
- 금재호·조준모. 200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35-66.
- 김교성. 2007.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143-169.

- 김난도. 2007. 《사치의 나라 - 럭셔리 코리아》. 미래의 창.
-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 김성환·전용석·최바울(2004).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제5회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영란. 2004.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근로빈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45-273.
- 김인준. 1998. “외환, 금융위기의 특징과 IMF.” 《IMF 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학주. 2004.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09-131.
- 김학주. 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 남준우. 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7(4): 1-24.
- 노동부. 2005.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5년 12월)》.
- 류상영. 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민승규. 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47. 삼성경제연구소.
- 박길성. 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원암·최공필. 1999. “한국 외환위기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5(3).
- 삼성경제연구소. 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47.
- 서범석. 1998. 《1999년 국내외 광고계 결산》. 제일기획.
- 성경룡. 1998.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 시민사회와 제3부문의 활성화.” 《IMF극복의 정책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사회발전연구소. 2007.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 자료집.
- 소비자보호원. 1996. 《국민 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 소비자보호원. 1999. 《IMF 전후 소비생활 변화비교》.
- 소비자보호원. 2000. 《소비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송정기·박재규. 2001. “농촌지역주민의 사회계층과 일상생활의 변화.” 《농촌사회》 11(2): 37-66.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26(1): 23-50.
- 신관호·신동균. 2007. “소득분포의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13(2): 63-123.
- 신광영. 2008.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기रो에 선 중산층》. 인간사랑.
- 신동균·전병유. 2005.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28(3): 77-109.
- 오정훈. 1999. 《외환위기 이후 소비트렌드》. LG경제연구원
- 유경준. 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1): 1-17.
- 유홍준. 2000. “경제위기가 직업세계 및 일상생활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비교사회》 3: 164-205.
- 윤진호. 2005. “소득 양극화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 이상민. 2007. “국내 고급소비시장의 사회학적 분석.” 《소비문화연구》 10(1):131-152
- 이정우·이성립.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79-109.
- 이호성. 2004. “외환위기 후 사회공동체의 결속력 약화와 사회문제.” 《담론201》 6(2): 71-98.
- 장미혜. 2008.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기रो에 선 중산층》. 인간사랑.
- 전병유. 2007.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13(2): 171-243.
- 조성원. 2005. “외환위기 이후 소득 5분위배율의 구조적 변화.” 《재정논집》 20(1): 93-109.
- 최순화. 2001. 《소비시장 고급화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최효미. 2005. “자영업자의 근로소득분석.” 《노동리뷰》 2: 60-72.,
- 최희갑. 2002.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8(2): 1-19.
-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두승·김병조. 2008. “한국의 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기रो에 선 중산층》. 인간사랑.
- 홍성민·민주홍. 1999. “IMF 시대의 중산층 약화실태 및 재구축방안.”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 홍원탁. 1998. “한국사회 경제위기의 원인.” 《IMF 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종학. 2006.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응용경제》 8(2): 5-57.
- Banerjee, Abhijit V. 2008.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3-28.
- Budd, Edward C. and T. C. Whiteman. 1978. “Macroeconomic Fluctuation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nd Earnings in the US.” in Zvi Griliches et al. (Eds),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Inequality*. Halsted Press.
- Horrigan, Michael W. and Steven E. Haugen. 1988. “The Declining Middle-Class Thesis: a Sensitivity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May: 3-13.
- Khakhulina, Liudmila. 2001. “The Subjective Middle Class; Income, Material Situation, and Value Orientation.” *Sociological Research* 40(4): 71-92.
- McMahon Patrick J. and John H. Tschetter. 1986. “The Declining Middle Class: A Further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September: 22-26.
- Pressman, Steven. 2007.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Issues* 12(1): 181-200.
- Rosenthal, Neal H. 1985. “The Shrinking Middle Class: Myth or Reality?” *Monthly Labor Review*

March: 3-10.

Simmie, James and Brady Ray. 1989. "Middle Class Decline in Post-Industrial Society." *Long Range Planning* 22(4): 52-62.

Weller Christian. 2006. "The Middle Class Falls Back." *Challenge* January-February: 16-43.

[접수 2008/5/26, 수정 2008/11/28, 게재확정 2009/1/20]